

광주시장 경선률? '.....' 말없는 지도부

새정치, 공론조사 도입땐 일정축박...이번주 끝내야

5월 발표·전략공천 관측 속 반발 여론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경선 룰과

현 후보 지지 선언으로 경선 실시 여부를 두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공론조사식 배심원제 방식이 도입된다면 배심원 선정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최소한 이번 주말까지 경선 룰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도부는 기타부타 말이 없다.

지금까지 최고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당내 기구에서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광주 국회의원들의 느닷없는 윤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강운태 40.1%, 이용섭 36.9%, 윤장현 12.2%로 나타났다.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의 후보 적합도를 합하면 77%에 달하는데 12%대의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 한다는 것은 상식에 새정치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사회적 충격이 큰 가운데 이권의 심장인 광주에서 무리한 전략공천이 이뤄진다면 그 후폭풍은 지방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사실상 안철수 공동대표를 배제한 '낙하산 공천, 지분 공천'이라는 비난과 반발이 폭발하는 것은 물론 새정치의 근간을 흔들어 서울시장 선거 등 수도권 전선에 치명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위 관계자는 "김한길 대표에게 '광주시장 후보를 무리하게 전략

공천 한다면 그 과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조언한 바 있다"며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장 '전략공천설'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경선 룰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전략공천을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이번 주말까지 경선 룰을 정하지 않고 5월 연휴 직전에 전략공천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별다른 명분 없이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공천 한다면 중앙당이 호남을 정치적 '봉'으로 보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전략공천이 강행된다면 광주에서는 '새정치 바람'보다는 오히려 광주 민심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의원들 공천 참여 배제하라"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일부 당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국회의원들의 공천 참여 배제"를 주장하며, 입내현 시당 공동위원장의 회의장 입장을 막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새정치, 광주 광역의원 선거구 4곳 '여성경선지역' 지정 예고

일부 남성 후보들 강력 반발
'혁신 비례대표' 충돌 빛을 드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역의원 공천 과정에서 선거구 19곳 중 4곳을 여성을 배려한 '여성 경선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선거구의 남성 예비후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확정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당이 광역·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혁신 비례대표' 전략공천 등을 통해 중앙당 주도로 개혁공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시·도당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24일 시당 회의실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열고 광역·기초의원 여성 경선 지역 확정 및 향후 경선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되진 않았지만, 광주 동구를 제외한 서·남·북·광산 등 4개 자치구의 선거구 한 곳씩을 여성 경선지역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후보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남성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후보 공모에 앞서 여성 경선지역을 우선 지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뒤늦게 여성 경선지역을 지정하면, 이미

▲지역공헌도 ▲의정모니터 및 주민참여 예산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복지·노동 발전 분야 기여도 ▲청년세대 대표성 등이다.

지도부는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15% 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당현을 활용, 중앙당이나 시·도당이 '혁신공천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를 추천하면 TF의 심의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전략공천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혁신 비례대표' 선정은 주로 광역의원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외부영입을 위한 인재풀이 사실상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중앙당이 광역·기초의원 공천에까지 관여, '특정인사 심기'로 변질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출신 사이에서는 안 대표측 인사들을 위한 배려 차원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앞서 지난 8일 '나비나비'라는 발신자 이름으로 주 의원의 박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는 '기사작성 참고용'이라는 제목의 광주일기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발송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 측은 "박사논문 표절 의혹은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광주일에 의해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수년 동안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논문을 접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광주일의 최초 작성자를 찾기 위해 메일을 작성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최초 발신자를 밝혀냈다.

경찰은 발신자를 주적해 메일의 작성자와 유통자가 누구인지 밝힐 계획이다.

또 메일의 사실 여부와 함께 광주일을 통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지사 후보 논문표절 의혹 제기 이메일

순천경찰, PC방 확인...발신자 추적 나서

전남지사 후보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의 박사논문 표절이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메일'의 출처를 확인하고 발신자 추적에 나섰다.

순천경찰서는 24일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메일이 순천과 광양지역 PC방에서 발신된 사실을 확인하고 발신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광주일의 최초 작성자를 찾기 위해 메일을 작성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최초 발신자를 밝혀냈다.

경찰은 발신자를 주적해 메일의 작성자와 유통자가 누구인지 밝힐 계획이다.

또 메일의 사실 여부와 함께 광주일을 통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30배 과태료 부과'

보성군수 후보 지지 호소

음식물 제공자 검찰 고발

보성군선관위는 24일 보성군 한 음식점에서 예비후보자 A씨를 초청한 뒤 선거구민 7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보성군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7명에게도 1인당 30배에 상당하는 63만7500원씩 총 446만2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되며, 이들로부터 음식물과 물품 등을 제공받는 유권자들에게는 해당 가격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누리 서울시장 후보 경선 내달 12일로 연기

새누리당은 24일 6·4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다음달 12일 열기로 했다.

하자는 당의 정무적 판단도 있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은 대의원(20%), 당원(30%), 일반유권자(30%), 여론조사(20%)의 기준 규칙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은 경선 원칙을 유지하되 후보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급" 급 매매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38P→9000만원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53P→1억 3000만원 (시세/감정가 2억원)

77P→2억 3000만원 (시세/감정가 3억원)

단, 2014년 4월 30일까지

문의, 010-3605-5000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1:1 개인지도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천 경매 H.P 010-3605-5000